전남도 '예산 운영' 최우수

상사업비 188억 받아

전남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운영성과 평가에서 16개 시·도 중 최우수도로 평가돼 역대 최고액인 188억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다. 상사업비는 정부에서 지자체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격의 예산이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이번 예산운영성과 평가에서 전남도는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 회계운영 성과, 지역경쟁력 향상, 지역발전정책협조도 등 4개 분야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도로 선정됐다. 특히, 투자의 효율성과 사업의 시급성 등 사전 타당성 검증과 성과부진 사업에 대한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전남도와 여수시, 해남군, 함평군 등 이순신 장군 관련 사업을 연계 추진하는 지자체 간 공동사업을 적극 발굴해 유사·중복사업을 사전 방지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이번 상사업비 188억 원은 도 본청 148억 원을 비롯해 화순군 10억 원, 여수시·고흥·보성·해남·함평·완도군 각 5억 원 등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

"노고단 케이블카 조속 설치를"

지리산 생태계 복원·관광 활성화 기대

전남도의회 결의안 촉구

전남도의회는 14일 24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지리산 노고단 로프웨이(케이블카)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지리산 일주 도로(지방도 861호선)를 통해 연간 80만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대기오염과 산림생태계 파괴는 물론 야생동물의 서식지 분단과 로드킬 사고 등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이를 대체할 교통수단으로 지리산에 로프웨이 설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일부 환경단체들이 자연환경 훼손을 이유로 로프웨이 설치를 반대하고 있으나 오히려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태계를 복원함은 물론 지리산의 빼어난 경관을 국민이 향유할할 수 있는 등 지리산 관광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윤시석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리산 인근의 다른지역 자치단체가 케이블카 설치를 서두르고 있어 우리 지역에 이 사업을 가져오는 것이 시급하다"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방도 861호선의 대체수단으로 로프웨이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 6,372억 2차 추경안 통과

지방채 발행 등으로 지방재정 악화 우려를 낳았던 전남도 추경예산안이 의원들의 찬반토론과 표결 끝에 통과됐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예산이 예결위에서 되살려졌다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남도의회는 14일 2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올 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15건, 결의안 4건,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수립 등 23건을 의결했다.

6천372억 원 규모의 전남도 2차 추경예산안은 찬반토론 끝에 표결에 부쳐져 재석의원 41명 가운데 찬성 33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고송자(민노당·비례).이홍재(민주당·순천 2) 의원 등 일부 도의원이 "상임위가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가 사전 상의없이 되살려 상임위를 무시했다"며 예산안 심의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의 상임위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도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의결됐다. /최권일기자 cki@

전남 경차 관용차 수 '전국 꼴찌'

■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 국정감사 자료 분석

937대중 24대 2.6% 그쳐 '녹색의 땅' 무색

전국 16개 지자체 평균 10.8%…광주는 9.4%

'녹색의 땅'을 표방하고 있는 전남도의 관용차 중 경차 비중이 2.6%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자체별 관용 경차 보유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12월 현재 전국 16개 지자체의 관용차량 총 1만6천131대 중 경차는 1천749대로 전체 대비 10.8%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남도의 경우 지난해 말 현재 937대의 관용차 중 2.6%인 24대만이 경차였다. 이는 전국 최저 수준으로 전북과 충북이 2.7%로 뒤를 이었다.

전남도의 경차 비중은 지난 2006년 0.7%, 2007년 1.2%에서 매년 늘고는 있으나 최근 3년 동안 관용차 증가 대수가 48대에 불과, 전체 경차 비중이 급속도로 높아지지 않았다.

광주는 394대의 관용차 중 9.4%인 37대가 경차였다.

반면, 경기도는 3천79대의 관용차 중 25.3%인 778대, 인천은 756대의 관용차 중 14.9%인 113대가 경차였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경차 사용 권장에도 불구, 지자체의 경차 사용이 극히 저조하다"며 "지자체가 경차 비중을 늘리며 운영비 절감과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내일 하토야마 정권 출범

일본 국회가 16일 중의원과 참의원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왼쪽) 대표를 차기 총리로 공식 선출할 예정인 가운데 14일 총리관저에서 아소 다로 총리와 하토야마 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행사 대비 '외국인 홈스테이' 50가구 선정

광주시, 매뉴얼 개발 등 2015년까지 1천가구로 확대

2015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국제행사를 겨냥한 체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외국인 홈스테이 육성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 사업은 광주시의 부족한 숙박 인프라를 확충하고 외국인들에게 예향 광주의 정서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는 14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박광태 시장과 관광분야 종사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하계U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외국인 홈스테이 발족식'을 열고 홈스테이 호스트로 선정된 50가구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했다.

시는 올해 5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100가구로 확대하는 등 하계 유니버시아드가 열리는 2015년까지 총 1천가구 규모로 홈스테이 가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광주국제교류센터와 함께 홈스테이 운영매뉴얼을 개발하고 홈스테이 희망가정에 대해 외국인 응대 에티켓과 외국어 회화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또 홈스테이 호스트 가정이 외국인 손님에 대해 1인당 하루 25달러(아침식사 포함)의 숙박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기준도 마련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현장과 시각

문화예술위, 마인드부터 바꿔라

김 미 은
문화부 차장

이번 달초 울산에서 열린 '전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포럼의 열기는 뜨거웠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주최한 포럼의 주안건은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 기금 배분 방안'.

최근 광주 등 지역 언론들이 '문화예산의 서울 집중화'를 성토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성명서가 발표되는 등 홍역을 치른 터라 주최측이나, 지역 문화재단과 자치단체 공무원 등 참석자들은 긴장한 상태에서 토론을 이어갔다.

참가자들은 이번 포럼이 의견을 모으는 자리인지, 일방적인 통보 자리인지 행사 성격부터 따졌다. 또 지역여건을 무시한 서울중심 신규사업 시행, 사업 계획 늑장 확정으로 자치단체 예산 확보가 어려운 점 등 위원회의 '일방통행식' 정책 결정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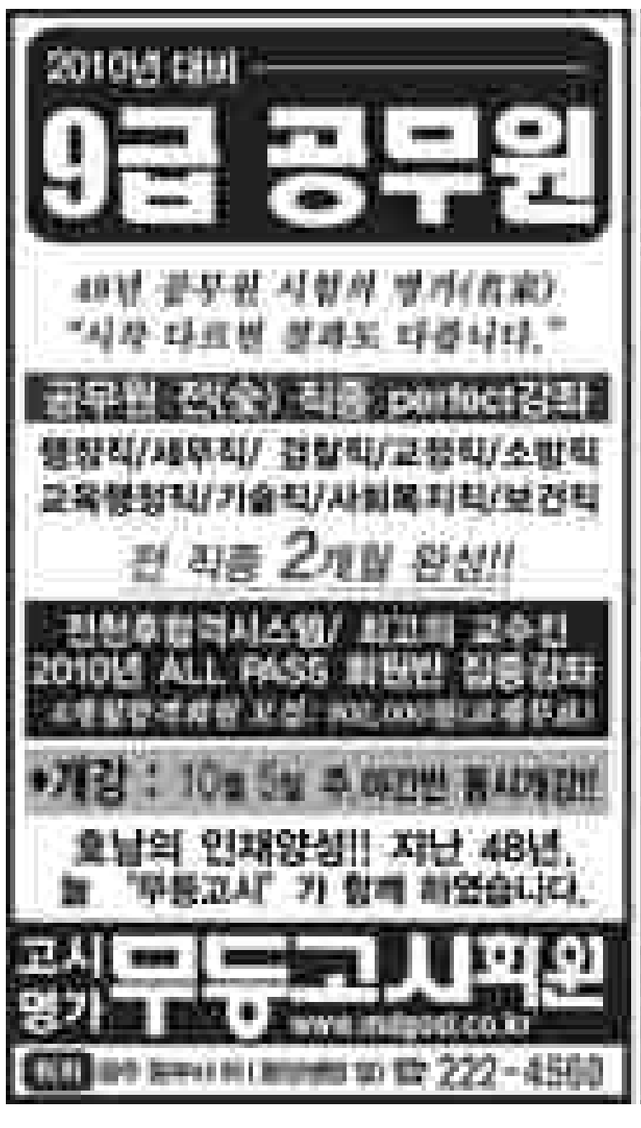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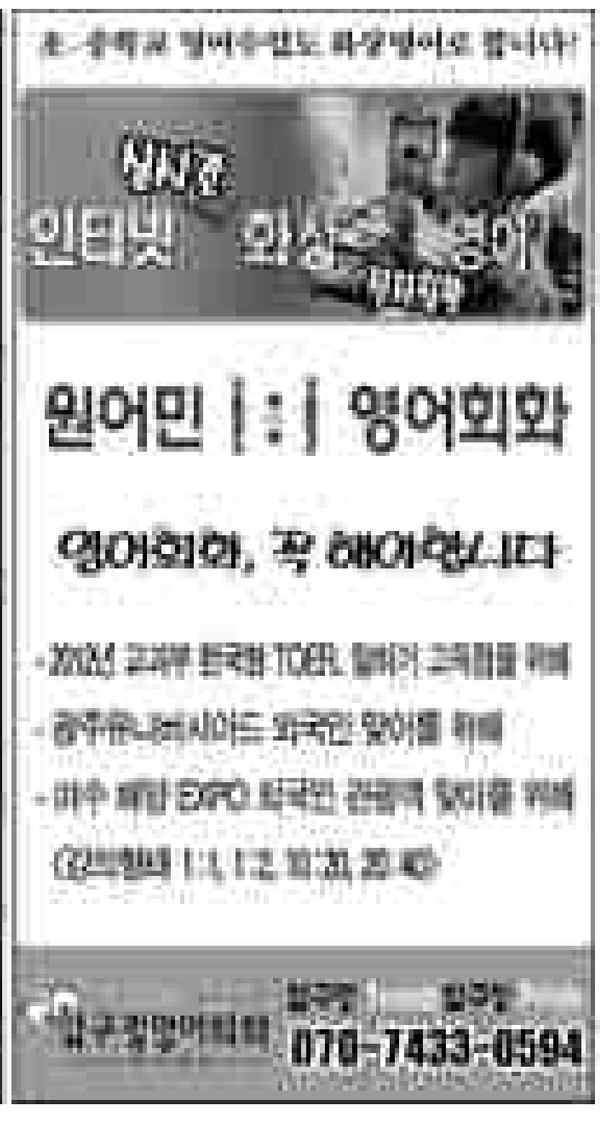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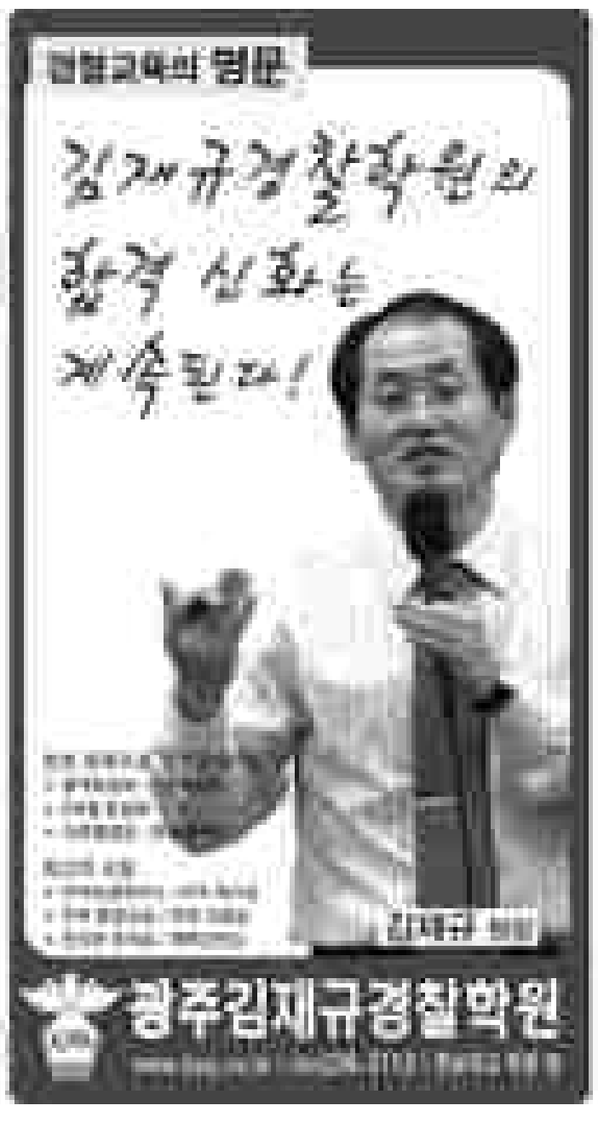
이날 서울문화재단 관계자는 지역 참가자들과는 조금 다른 발언을 했다. 위원회와 문광부에 들어가 수시로 정책을 조율하는데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는 '부러운' 하소연이었다. 지역예술인이나 공무원의 경우 '의견 조율'이나 '로비'는 고사하고, 정책이나 지원 등 정보에 접근하기조차 힘들다. 문서나 전화를 통해 얻는 정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예산 확대 등 개선점이 수두룩하지만 위원회가 '귀'를 열고 지역의 소리를 들으려한 건 긍정적이다. 지역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서울과 지방의 예산 배분율을 조정하고, 15일 광주서 정책설명회를 갖기로 하는 등 지역과 소통하려는 움직임은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1주일 후 오광수위원장의 발언은 뒷통수를 쳤다. 예술활동의 70~80%가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위원회 전체가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은 어렵겠다는 발언이었다. 서울 예술인들과 직원들의 불만이 있어 "이전이 유동적"이라는 것이다. 위원회는 2012년까지 150명 중 서울의 시설관리 인력 49명을 제외한 전원이 나주로 이주하게 돼 있다.

기득권을 빼앗길 서울예술인들이나 생활 터전을 옮겨야 하는 직원들의 불만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이전이 논의된 초창기부터 제기됐던 문제였다. 이미 지방 이전소위원회까지 꾸려지고, 이전 준비를 진행해야하는 상황에서 새삼스레 문제를 끄집어낸 저의가 궁금하다. 위원회는 이번 발언이 위원장의 '사견'이고, 정책결정은 위원회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예술위원 10명 중 9명이 서울 인사임을 감안하면 왠지 꺼림칙하다.

지난 포럼에서 위원회측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지역이기주의로 싸울 게 아니라, 문화예술 전체 파이를 키우는 데 힘을 모으자고 했다. 옳은 말이다.

하지만 이번 오위원장의 발언에서 보듯, 위원회의 '서울중심적'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다면, 파이가 커진다 한들 그건 또 다시 서울 몫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위원회, 더 나아가 문광부의 과감한 의식 전환이 없다면, 문화예산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서울'의 일그러진 모습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mekim@kwangju.co.kr